

법치수호의 날 자료

일 시 : 2019년 4월 25일 (목) 10시 ~ 12시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회의실

- 식 순 -

1. 개회선언 등
2. 축하
3. 법치 수호의 날 동영상(5분 내외)
4.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출범
가. 경과보고 나. 선언문낭독
5. 법치수호센터 출범
가. 경과보고 나. 출범선언 및 향후활동계획 다. 감사패증정
6. 우리의 주장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변호사연합)

<참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현, 채명성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 회장 구상진, 부회장 배보운 /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 차기환, 김기수 /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 윤형모 /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 김기수 / 자유와 인권연구소 : 고영일

<참여 변호사>

고영주(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이언주, 백승재, 홍세욱(행동하는 자유시민) / 도태우(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 / 정주교[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후원안내> 신한은행 140-010-514350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치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외귀빈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마땅히 모든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행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현 정부 하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법무부 및 대한변협의 법정기념일 행사와는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 동안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며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김경수 판결에서 보듯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근거에서 부정하는 여론조작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및 전직 대법원장 등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무차별 구속되어 정치보복을 당하는 실질적·절차적 적법성의 붕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스스로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을 무력화시키다가 하면, 민주노총의 횡포를 수수방관하는 공권력의 비겁함도 보고 있습니다. 법치행정을 무시한 탈원전의 횡포와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개입,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에 의한 경제파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재촉하는 정부의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자유와 법치 및 시장질서 파괴에 양심적 변호사들은 더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변호사연합)을 결성하여 ‘법치수호센터’를 출범시키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뜻을 같이하는 용기 있고 깨어 있는 법조인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갈망하며 우리의 앞날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축 사

법치수호의 날

2019. 4. 25

법치와 준법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지정된 법의 날을 맞이하여 참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이 탄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법치주의와 준법사회를 갈구하는 절박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변호사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가 6.6배 성장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려 350배가 성장하는 경이로운 기적을 이루어 외국으로부터 로켓처럼 치솟아 오른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성취와 함께 민주화도 이룩함으로써 세계인의 찬탄과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의 날 정신을 구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꾸준한 민주화 노력으로 그동안 자유는 신장되어 왔고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로 정착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인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아연실색을 넘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법 위의 촛불을 내세우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는 물론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작심하면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놓을 수 있구나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상당기간 국정을 담당하면서 대통령이나 총리도 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그 수행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음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나라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거나 한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역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탈 원전을 내세워 아무런 정책 평가도 없이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재정 손실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넘어갑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시민과 청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주행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더욱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북핵 제거라는 당초 목표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변질되더니 이제 정부는 북한 제재 해제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그만 두라는 말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을 살찌우는 정책이 아니라 북의 노예 같은 동족들을 하루 빨리 구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에도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삼권 분립의 파괴 행위입니다.

선거 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판사가 증거에 의하여 재판한 사안을 부정하면서 탄핵으로 위협하며 급기야는 재판장이 기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파면부터 시키는가 하면 뒤이은 형사 재판에서는 이중 구속 등 심대한 절차적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 구속여부 등 사법적 판단이 갈리는 불공정 처사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이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온통 보복성 과거 들추기에 혈안이 된 분위기입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소리에 깊은 탄식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이 깨어나 법질서 회복을 단호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의 수문장이 되어야 할 곳이 언론과 법조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다수 언론은 오히려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고 사법부는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 미래가 암담한 이때에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님들과 변호사 단체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을 발족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출범한 미디어연대와 함께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쾌거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하면서 탄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갈등할 때가 아님

니다.

출범하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 태동하였지만 개개인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일념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을 일깨우면서 세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은 창립취지대로 법치를 능멸하는 일체의 월권과 농단, 법 파괴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비상식적이고 반 법치적인 행위를 저지, 척결하는데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발족하는 ‘법치수호센터’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변호사 연합의 단합된 힘만 갖춘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짓밟거나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훗날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반듯한 대한민국이 되고 북한 동족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이 오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날에 이르러 오늘 출범하는 변호사 연합이 그 성취의 주역이었노라는 훈장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前 국무총리 정 홍 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 선언문

71년 전 한반도 남쪽에 자유인들의 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압제를 물리치고 법의 지배를 확장하는 생명의 약동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자유와 법치는 우리 헌법의 근본질서이자 현대 문명국 헌법의 일반원리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을 그 핵심요소로 하는 자유민주정치체제를 기본질서로 못 박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는 국민 개개인을 주권자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주권자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권력분립이 보장되고 법의 지배가 관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수 년 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질식사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공기와도 같은 자유가 날마다 희박해져 갔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권과 정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고 전체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인지 역사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부는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질서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인 기치 아래 계속해 온 언사와 행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이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대통령, 전두환 전대통령, 양승태 전대법원장, 네 명의 전 국정원장 및 수많은 전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 대하여 역사적 정치적 평가에 맡겨야 할 사안들을 무리하게 형사법의 잣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절차적 적법성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고, 직업공무원제도·책임의 원리·민주주의와 관용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으며,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마저 위태롭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개척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국가발전의 동력마저 소진되는 데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의 방향을 제시하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사면을 언급하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전례 없이 임명을 강행하며, 여당은 드루킹·김경수의 여론조작 사건 등에서 재판관에 대한 겁박을 시도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각종 위원회는 정상적인 법치행정 시스템을 허물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다가 무산되었음에도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위헌적인 집행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0만 명에 달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인권 에 대해서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원리와 관련법규를 묵살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인신구속의 엄중한 기준 대신 정권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사라지고 위법수집증거가 범람하며, 정권의 표적이 된 사람에게는 인격말살과 수사권 남용을 자행하고 철야·강압·불법 수사마저 일상이 되고 있다. 수사의 개시와 법적용,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서 형평의 이념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다.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시장원리나 경제력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훼손하여 국가경제의 본원력을 상실시키고, 국민연금을 통하여 사경제 질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위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노총의 법질서 무시는 정상국가에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조치는 촉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정 성향의 집단이 법원·검찰·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동료 법관 탄핵을 주장함에 이르러 법원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에도 사법부 독립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에 굴종하여 독립 수호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참상은 사법의 이름으로 법원리를 능멸하고 농단을 척결한다며 법의 지배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 때문이며, 그 결과 우리는 문명의 표피를 쓴 야만이 법공동체의 존립과 자유의 토대를 붕괴시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자유와 법치를 간구하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

단체들이 연합하여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의 발족을 선언하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이념이 관철되는 나라를 지향하며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으기로 한다.

1895년 4월 25일 재판소구성법 이래 120여 년간 근대적 자유와 법치를 향한 민족공동체의 노력은 지금 최악의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지금껏 쌓아온 기적적인 성취들을 무참히 파괴하는 결말에 이를 뿐이다. 경각심과 분발을 호소하며 다시 한 번 함께 다짐한다.

자유와 법치가 관철되는 나라를 위하여!

2019년 4월 25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법치수호센터 출범 선언

주지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이다. 따라서 나라의 조직과 기능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물론, 국민의 생활까지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객관적 법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은 헌법정신과 직업적 양심에 투철한 법조인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법을 이념추구의 수단으로 타락시키는 반헌법적 반법치적 병폐가 만연하여 일찍이 ‘자유민주연구원’이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최근까지 이러한 시대착오적 만행을 적발하여 바로잡고자 투쟁해왔음은 다행이자 감사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은 이를 이어받아 ‘법치수호센터’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일부 변호사 및 노동 단체 등이 자유와 변영의 방파제인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의 여러 사법작용과 비정부 활동들이 헌법을 빙자하여 헌법의 존립근거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이 정치라고 하면서 편파적 판결을 남발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는지, 수사를 수단으로 주권자를 교체하려는 위헌적 반국가적 세력을 고무하면서도 자유와 인권을 지키며 북한동포를 해방하려고 애쓰는 애국세력을 어떻게 탄압하는지, 누가 변호권과 집단의 위력을 악용하여 국가정체성을 허무는 반역을 비호하고 기업과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폭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지, 나아가 정부와 국회, 여러 정당들이 헌법질서를 존중하는지, 그 정신과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훼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모든 합법적 조치와 투쟁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업들이 일조일석에 성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양심과 정의와 문명과 상식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이며, 중단 없는 투쟁

의 시간이 우리의 대의를 증명할 것이라 확신한다.

향후 활동계획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반법치적 행태는 점점 노골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법치수호센터’의 조직을 완료해서 우선 남북군사합의가 위헌 무효임을 확증하도록 하고, 국민주권을 편취한 김경수·드루킹 사건, 환경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 전직 대통령 및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 농단’ 사건, ‘전대협’ 대자보 사건,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투기 및 서훈 의혹 사건, 민노총의 행패 관련 사건 등이 헌법정신과 법의 취지에 맞게 적법 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폭로하며 투쟁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명 발표,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기고, 고소·고발, 제소, 시위, 항의방문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9. 4. 25.

법치수호센터장 이재원

※ <안내사항> 문재인 정권세력의 범법 및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 우파유튜브 고발에 대한 법적 조력을 포함한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법률대응,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등 기업의 자유 억압에 대한 법률대응, 4대강 보 해체저지 협력, 한유총과 소상공인 등 이 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 활동, 자유와 법치의 관점에서의 판·검사 및 현재 재판관에 대한 평가 등도 법치수호센터나 변호사연합의 향후 활동계획에 포함되었거나 포함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인 법률대응은 “Freedom is not free.” 정신에 따라 종래의 무료변론 원칙이 아닌 당사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